"못 따라가면 접어라"…농민 퇴출, 기업농 육성

영세 농어민 벼랑끝 내모는 '농어업 선진화 방안'

조합 합병, 농업 보조금 줄이고 경쟁력 위주 재편

영세농어민 많은 전남 직격탄…농사 포기 속출할 듯

정부의 농어업 선진화 방안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 등 정부의 각종 농어업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쟁력 강화'라는 잣대로 가족농업 중심의 한국 농업을 시장과 기업농업 중심으로 재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개월 만에 선진화?=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23일 구성된 비상설 민관합동 임시협의체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농어업 개선 방향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농업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도 풀지 못한 해묵은 숙제를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된 위원회가 몇 차례 회의를 통해 과연 어떤 획기적인 발전 방향을 내놓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농업의 숙원 과제를 위원회 각 분과별로 몇 차례 회의만을 거쳐 해결하겠다는 것은 농정을 너무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농어업계와 학계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려운 농업문제를 절차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원회를 급조해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경쟁력 중심 개편=위원회의 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의도대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업보조금 개편과 조합 간 대규모 합병 추진이 핵심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보조금은 기업농과 주업농을 육성하는 데 사용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의 농축산업 진출 허용과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방안도 포함돼 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산 주체를 규모화하고 자본을 가진 대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대신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사들은 농정지원 대신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활보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전남 농어업 현실=현재 전남지역 농어업 종사자 수는 50만여 명(농업 43만8천여명·어업 6만1천6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농업 인구 비율이 13.8%이며, 어업은 32%에 이를 정도로 농어업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전남 농가의 경우 전체경지면적 대비 1ha 미만 농가가 63%에 달하고 있다. 10명 중 6명이 소규모 가족 농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농가와 경지면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만, 농가소득은 가구당 2천754만여원으로 전국 평균 3천196만여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9개 도(道)중에서 농가소득은 8위로 최하위권이다.

농가부채도 가구당 2천934만여원으로 5조5천500억원에 달하고 있고, 전국에서 5위로 높은 농가부채를 안고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농가에 지급된 보조금은 240개 부문에 7천140억원에 이른다. 이는 모두 국가보조금이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농업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앨 경우 영세 농가들은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농민 피해와 반발 예상=최근 정부의 농업정책이 그동안 농민보호 정책에서 경쟁력 강화 정책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한 만큼 아직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갖추지 못한 영세 농민들을 고사(枯死)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농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농민들 입장에선 영농 및 생활의 토대 역할을 해오던 정부 지원금이 농업 기반시설 등으로 흘러가면 결국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농민연대는 정부의 농어업선진화 방안이 농업의 기능을 자국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 차원이 아닌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신자유주의 농업구조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연대 측은 "농어업 선진화방안은 농업과 농정의 주체인 농민은 없고 자본을 앞세운 농기업만 있다"면서 "한마디로 농민들의 직불금을 빼앗아 농기업에게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주겠다는 것으로 농민 퇴출, 농기업 육성방안"이라고 정부의 농어업선진화 방안을 강력 비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여)씨 측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인간은 누구나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있다"

■ 대법원 존엄사 인정 의미

21일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 것은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갖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는 경우라면 평소의 의사결정에 따라 치료 중단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자가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존엄사 의사를 밝혔을 때와 환자의 평소 언행 등을 통해 연명 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때만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선을 그어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

존엄사 의사는 전적으로 환자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해 가족이나 주변에서 환자의 뜻과 상관 없이 존엄사를 남용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계한 것이다.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김모(여·77) 씨의 가족이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낸 이번 사건에서도 김 씨의 분명한 의사 표현이 없었던 상황에서 존엄사 의사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가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다.

대법원의 판결로 환자의 의사에 반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엄사 허용과 그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6월 김 씨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본격적인 논란에 불을 당긴 셈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 씨의 상태를 회복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 씨의 존엄사 의사도 가정(假定)에 불과하다는 일부 대법관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존엄사 허용을 둘러싼 윤리적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국의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환자 측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연명 치료 중단을 판단할 세부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존엄사 의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가 사실상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의 언급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존엄사에 대한 판단을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연명 치료 중단의 기준과 절차, 남용시의 처벌 방안 등을 세밀하게 규정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서 존엄사의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21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평소처럼 차분한 분위기였다. 김씨가 입원해 있는 세브란스병원의 9층 내외과 중환자실 앞에는 병원 관계자 2명이 지키고 선 상태에서 취재진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았다.

중환자실에는 15개 침실이 있으며, 김씨는 중환자실의 오른쪽 끝인 10번 침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김씨의 현재 상태는 신체접촉을 하면 반응을 보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환자 가족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자가 치료 방법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광주, 2030년 65세 이상 22% 초고령사회 진입

광주지역이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광산구 우산동과 북구 운암동의 노인복지시설 추가 입지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시 고령화 현황 분석 및 노인 복지시설 진단'에 따르면 광주는 2030년에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가 초고령사회 기준인 전체의 20%를 넘어선 21.9%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30년 추정 인구는 139만3천163명으로 2010년(145만267명) 이후, 2020년(143만8천430명), 2025년(141만7천692명)까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는 지난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만1천180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었다.

전체 인구는 꾸준히 감소

노인복지시설 확충 필요

이는 전국 노인인구 비율 9%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7대 도시(5~8%)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광주지역 고령인구(2005년 기준)는 북구가 전체의 30.9%인 3만1천282명으로 가장 많고 서구(1만9천938명), 광산구(1만8천380명), 남구(1만8천365명), 동구(1만3천215명) 순으로 조사됐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인인구 비율로는 동구가 11%로 가장 높고, 서구, 북구, 광산구가 6%로 낮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를 14세 미만 인구로 나눈 노령화지수는 동구가 85로 가장 높고, 광산구가 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85세 이상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장수도는 5개구 모두 5%를 기록했다.

85세 이상 인구는 북구 건국동이 186명으로 가장 많고, 서구 양동, 광산구 하남동이 각각 23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독거노인은 광산구 우산동 690명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 첨단1동이 47명으로 가장 적었다.

19곳의 노인복지시설 중 절반 가까운 10개(52.6%)가 서구에 있고 동구와 남구 각 3개, 북구 2개, 광산구 1개 등으로 파악됐다.

노인복지시설 이용 추정 인구는 많지만 노인복지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는 광산구 우산동과 북구 운암2동이 꼽혔다.

한편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설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